

東北亞地域의 經濟 및 技術協力 展望*

金 成 勳**

<目 次>

- I. 東北亞經濟圈의 浮上
- II. 東北亞經濟圈의 基本구도
- III. 中·蘇·日의 상호인식
- IV. 中國의 對韓認識
- V. 韓國의 對應

I. 東北亞經濟圈의 浮上

1989년 여름 中·蘇·日 경제전문가들이 소련 遼東 沿海州에 모여 이들 國家 간의 실천적 인 경제 및 기술협력방안을 공동토론한 것은 이제까지 構想으로만 주장돼 오던 東北아시아 경제협력안에서 進一步한 움직임으로 해석해야 옳다. 그것도 東北亞經濟圈을 주창해 오던 中國의 이니셔티브에 의했다기 보다 소련이 이를 적극 수용, 실행했다는 데 더 큰 意味가 있다.

1980년대 이후 國際政治 및 經濟思潮面의 큰 흐름의 變化는 北方圈국가들에 의해 제기된 新데탕뜨의 전개이며, 그와 전후하여 西方세계 자본주의국가들 간의 지역별 經濟블록화의 급진전 현상이다. 특히 고르바초프의 新思考에 의한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와 글라스노스트(glasnost) 정책의 확대와 더불어 현재 蘇聯聯邦共和國과 東歐圈國家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경제면의 變化는 현세계정치경제체제가 多極化와 協力の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實證케 한다. 이데올로기의 대립 대신에 經濟協力の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이 가운데 80년대 후반부터 주로 中國으로부터 크고 다른 형태의 東北亞經濟圈 構想이 제기되고 있다. 처음에는 上海 등 일부 海岸지역의 경제관계 연구소들로부터 黃海圈경제협력 방안이 발표되더니 급기야 中國의 東北 3省 지방과 北京으로부터 정식으로 東北亞경제권의 제안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1988년 中國당국은 東北 3省의 각 연구기관을 망라하여

* 本論文은 1990年 3月 22日 本研究所가 주최한 「東北아시아의 經濟發展과 協力」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것임.

** 中央大學校 敎授, 中國研究所長.

吉林省 長春에 東北亞研究中心을 공동 설립하고 1989년 봄 北京에서 東北亞경제권 구상을 발표한 것이다. 오래 전부터 美, 日, 濠洲, 韓國 등이 太平洋경제협력체를 심도있게 토의해 오던 배경과 일맥상통하는 논리이지만, 前者의 제안은 中國과 蘇聯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韓國이 중추적으로 포함돼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말하자면 韓國은 中·蘇에 의해 제창되고 있는 東北亞경제권과 美, 日, 濠洲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太平洋경제이사회 구상에 겹쳐 떠오르는 接點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東北亞경제권 구상에는 北韓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6共 이후 盧政權의 적극적인 北方정책에 의해 최소한 經濟面에 있어서는 이들 북방권과 교류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 中國과는 벌써 서로가 5大무역상대국으로 부상되고 있고 소련과도 최근 영사처 상호설치를 계기로 급격히 경제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北韓과는 아직 초보적 단계에 불과하지만 경제교류부터 시작되고 있는 점 역시 주목을 끈다.

中國이 國際經濟의 대순환 논리에 따라 新興工業國에 이어 中國의 東海岸과 東北 3省을 발전시킬 구상에서 출발한 이 東北亞경제협력 개념은 소련의 구상——구체적으로는 1986년 11월의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선언과 맥락을 함께 하는 것으로서 南北韓은 지금 그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不分明한 상태이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이데올로기 수렴현상을 감안한 한반도 평화안정 및 통일방안의 일환으로 東北亞경제협력 문제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본다.

II. 東北亞經濟圈의 기본구도

中·蘇가 구상하고 있는 東北亞경제권에는 중국의 東北 3省과 내몽고, 그리고 山東省을 비롯한 東海岸 개방지구, 소련의 시베리아와 遠東지역, 그리고 日本과 南北韓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경제발전의 정도, 산업의 구조 및 자원의 부존면에서 볼 때 관계국가 상호간에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東北亞경제권에 포함된 나라들을 모두 합치면 총 9백만 km²의 면적에 약 2,3억명의 인구가 포함된다. 그러나 천연자원의 寶庫는 그 중에서도 만주, 즉 중국의 東北 3省과 시베리아 및 遠東地域이다. 특히 시베리아는 前人未踏의 자연자원의 寶庫이다.

한편, 일본은 막대한 자본과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거대한 인력자원과 동북 지역의 풍부한 자연자원 그리고 일정 수준에 도달한 소비재공업과 잠재력이 큰 시장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 간의 연속적인 국제수지 흑자로 資源貧國이지만 上位中進國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경영관리경험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東北亞경제권 내의 국가들이 상호간에 자국의 장점으로 그 자체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경제개발에 협력해 나가면, 즉 소련 시베리아지역과 중국 동북지방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일본, 한국의 자본, 기술 및 경영관리경험, 중국의 풍부하고도 저렴한 노동력 등을 이용하여 중국 동북지방과 소련 시베리아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고 관련산업을 발전시키면 이 지역의 경제발전 전망은 매우 클 것이다. 그래서 1960~70년대에 韓·美·日 삼국 간에 이루어진 삼각무역관계는 머지않아 中·蘇·韓·日 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진단된다. 현재와 미래에 있어 삼국의 공업화수준과 산업구조면에서 삼국 간의 경제협력은 단기적으로는 중국, 소련에 대하여 수직분업관계를 야기할지 모르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 이들 산업구조 역시 고도화됨에 따라 수평분업관계로 전환될 것이고, 이 경제권의 결합은 유럽경제공동체(EEC)와 같이 긴밀하게 결합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하나의 느슨한 자유무역지대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음에는 域內國家들의 交易構造를 조감해 보고 東北亞경제권에 관한 개별국가의 반응을 살펴 보자. 우선 中·蘇 교역에 있어서, 東北 3省이 전통적으로 중요한 창구의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초기엔 吉林省의 長春을 거점으로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하르빈을 중심으로 하는 黑龍江省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그것은 中·蘇 국경분쟁의 해소에 따른 발전적 조치이다.

1957~66년에 걸친 中·蘇 간의 변경교역은 주로 소련의 하바로프스크와 黑龍江省 간에 145백만원 규모로 이루어졌으나 1968년 국경분쟁으로 냉각기에 접어들었으며, 1982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兩國間 경제관계가 광역화·다각화되면서 邊境交易의 상대적 비중은 16퍼센트(1986년)로 감소하였으나 그 절대적 중요성은 1988년 이후 눈부시게 증가하여 1989년 현재 약 40억달러로 늘어났다. 그리하여 1987~88년 2년 동안의 무역량이 1978~86년 기간 중의 총무역량에 육박하였다. 현재 中·蘇 변경무역은 7지역으로 늘어나고 1일 노비자(no visa)지역까지 생겨났다. 특히 黑龍江省은 吉林, 遼寧, 그리고 上海 등지의 對蘇代理交易 창구일 뿐만 아니라 東歐와 중국을 연결하는 대륙架橋的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中國의 對蘇輸出은 농작물, 화학제품 및 경공업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수입은 주로 강철, 목재, 화학비료 및 시멘트와 같은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잠재적 공급능력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부족현상을 경험할 것이고 중화학 우선에서 경공업 중시로의 정책전환을 시도함에 따라 두 나라 간의 교역구조는 상당히 오랫동안 보완

적 성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련은 미국, 일본, 캐나다 및 유럽에서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중국의 섬유제품에 대한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兩國間的 교역에 있어서 貿易不均衡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연차계획에 따라 교역규모를 합의하여 주로 求償(barter)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리적 여건이나 도로망을 중심으로 하는 社會間接資本 및 역사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이 構想中인 東北亞 경제협력권에 있어서 2백여만의 우리 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東北 3省(吉林省, 遼寧省, 黑龍江省)은 中·蘇交易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것이 분명하다. 이제까지 中·蘇국경분쟁의 장기화로 인해 그 개발이 억제되어 온 이들 지역은 中·蘇 메탕트와 중국경제의 대외개방에 발맞추어 개발황금시대에 진입한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는 1988년 山東반도와 遼東반도 및 黑龍江省을 대외개방한 데 이어 1989년에는 吉林省을 개방했다. 특히 豆滿江 河口인 吉林省 延邊 조선족 자치주 훈춘지역을 經濟特區(자유무역지대)로 내정하고 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大連港을 特區級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다른 한편, 북한 역시 두만강하구 하산도를 經濟特區로 발전시켜 이에 대응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평양, 개성까지 연결돼 있는 시베리아 및 東北亞철도가 서울, 부산 또는 목포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다. 이 어느 경우든 한국과의 경제협력력을 촉진시키는 요인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III. 中·蘇·日의 상호인식

끝으로 中國이 東北亞經濟協力圈을 공식 제안하는 경우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는 것은 日本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東北亞협력권에서 일본은 중국의 최대교역대상국이기는 하나 양국은 과거의 역사적 불신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상당한 긴장관계에 있는 실정이다. 특히 1985년 中國의 對日 무역적자가 6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중국의 일본에 대한 문호개방압력이 加重되어 왔다. 그러나 여타 亞·太국가들의 경우와 같이 소련이나 중국이 제조상품의 對日 輸出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일본은 自國産業을 보호하고 실업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산업구조 조정노력을 낮추고 있으며 유통구조 역시 접근하기에는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兩國間的 교역을 伸張시키기 위하여 일본은 수출입은행의 차관공여 및 기타 軟性借款을 증대시키고 있으나 이것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奏效할지는 불투명하다.

日本の 경우 1965년 고지마(小島) 교수를 통하여 太平洋自由貿易地域(PAFTA: Pacific Free Trade Area)안을 제기하였으며 1968년에는 미국의 上院 동아시아·태평양관계 소위원회 연구진과 공동으로 太平洋貿易援助開發機構(OPTAD: Organization for Pacific Trade, Aid and Development)안을 고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들은 域內國家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특히 東南亞國家聯合(ASEAN)의 비판적 자세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다시 1980년 1월 오히라 수상의 주도 하에 太平洋經濟協力會議(PECC: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를 제안 주도하여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 상에서 개관해 본 지역협력에 관한 日本의 자세는 의도적으로 中國을 배제 내지는 경시하고, 더 廣域개념인 태평양지역을 대상으로 自國의 경제력, 나아가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제고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中國측은 日本이 주도권 유지를 위해 中國의 경제가 現水準 이상으로 더 이상 성장되기를 내심 원치 않고 있다고 본다. 반면 日本은 中國을 汎太平洋경제권의 일원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마저 확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日本은 소련으로부터 쿠릴列島 등 영토 반환을 얻어내기 위해서 대규모의 직접적인 對蘇 투자를 유보하고 있다. 中國에 대해서는 더 이상 中國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반드시 일본에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또다시 等距離 외교전략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렇듯 東北亞경제권 내부의 力學관계는 아직 未定인 것이 既定事實이다.

IV. 中國의 對韓認識

이와 같은 要因들을 고려할 때 東北亞經濟圈 구상 중에서 특히 韓·中 간의 분업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중국의 학자들이 동북아경제권의 초기 단계로서 「黃海經濟圈」을 거론하고 있는 所以도 바로 여기에 있다. 中國 吉林省 社會科學研究所 대표는 최근 중앙대학의 한 세미나에서 韓·中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韓·中 경제협력으로 중국이 얻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투자를 유치하여 중국, 특히 東北 3省的 필요한 자금부족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과잉자본의 상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산업구조 조정과 해외자원 개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對外投資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對中國 투자량은 극히 저조하다. 아직까지 중국 東北 3省은 교통, 운수, 체신, 통신업 등 사회간접자

본이 비교적 낙후상태에 처해 있고, 풍부한 에너지자원의 개발 역시 實需要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어 경제발전의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은 1970년대의 해외건설수출과 본국의 경제건설을 통하여 쌓은 풍부한 개발경험을 상호협력에 동원할 경우 東北地域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剝陽化되어 가는 한국의 輸出主導産業을 東北地域에 유치하면, 勞動集約的 産業을 발전시킬 수 있고 저렴한 노동력에 기초한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한국의 技術, 設備 및 企業經營方法을 받아들여 낙후한 自國의 산업기술과 經營 수준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발전된 선진기술이나 최신 첨단기술보다 오히려 중간 수준의 한국의 現技術體系가 더욱 쉽게 소화 흡수되어 단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영철학이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고, 인애, 정의, 예절, 신용 등의 행동준칙을 강조하는 儒敎文化的 특징을 간직하고 있어 문화적 배경이나 가치관념, 윤리, 도덕기준 등 유사한 점이 많아 중국인들이 더욱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거기에도 같은 언어와 문화풍습을 공유하는 한국교포의 존재가치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巨視的 觀點에서도 한국의 경제발전은 중국에 유익한 경험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政府主導 하의 경제계획과 시장경제체제가 적절히 조화된 한국의 경제성장 패턴은 지역간, 산업간, 大中小企業間의 불균형적 발전 및 소득분배의 불균형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으나, 결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여 짧은 기간 동안에 공업국가로의 전환을 완성하였으며, 신흥공업국가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국가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계획적 상품경제를 실시하는 중국에 대해서 한국의 경험은 巨視的 경제발전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輸出入市場의 多邊化에 서로가 기여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무역 파트너 가운데 실리추구에 철저한 일부 국가(일본을 지칭함)는 막대한 자금과 선진기술을 유치하는 댓가로 지나치게 가혹한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국이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면 그러한 나라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以夷制夷式 발상이다.

V. 韓國의 對應

中國이 고려하고 있는 東北亞經濟協力圈 구상은 서로 체제가 다른 蘇聯, 北韓과 같은 사회주의국가들과 韓國, 日本과 같은 자본주의국가들을 거의 대칭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

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해 주고 있다. 여타 국가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東北亞경제협력역안에 있어서도 경제적 동기만이 단일적 차원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外交・安保의 측면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中國은 장차 南北韓관계가 개선되리라는 묵시적 희망을 전제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해 1民族 2國家를 은연 중에 암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 韓・中 경제관계는 現時點에서의 韓・中 정치외교의 발전에 절대적인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中長期的 시각에서 본다면 韓・中 경제관계의 幅과 質이 크게 변화될 수 있는 소지가 크므로 그로 인해 장차 주요한 정치・외교적 협상의 지렛대가 될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 특히 中國의 開放政策 추진과 經濟改革의 계속적 추구가 가능성이 天安門사태 이후의 새 정권 하에서도 분명해졌고, 그들 나름의 이른바 國際經濟大循環論에 따라 向後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중국적 입장은 확고한 것 같다. 그렇다고 볼 때 韓・中 경제협력관계는 그만큼 중요성을 내포하게 된다.

최근 中・蘇관계 정상화를 前後하여 중국에서 발행되는 문헌에는 이미 1950년대 周恩來가 천명했던 「平和共處 5 個項原則」이 빈번하게 등장, 강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相互不干涉原則」의 주장이 특히 그러하다. 이는 결국 미국과 소련에 대해 중국의 자주적 입장을 더욱 강조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한편, 타국의 內政과 外政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스스로의 의무를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하여 북한에게 전통적인 수준 이상의 한국편향적인 압력을 가해줄 것을 기대하기란 무리다. 중국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對北韓 압력을 가해야 하는 상황이란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현저한 때이거나 외교적 모험을 하는 데 대한 실질적인 국익차원의 보상이 명백한 경우일 것이다. 다른 하나의 상황은 소련이 동구국가들처럼 우리나라와의 외교・정치관계를 대담히 개선하고 나서는 경우이다. 이 때 중국은 북한에 대한 큰 부담없이 對韓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단계의 韓・中・蘇 경제관계는 주변 국제정제가 더 무르익을 때까지는 수시로 변화하는 국제정치경제적 맥락 속에서 경제 및 문화 학술방면의 교류에 전념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앞으로 전개될 韓・中・蘇 간의 정치외교관계의 개선을 위한 국제관계의 이론적 바탕을 現段階에서 국민적 합의 하에 마련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족문제, 즉 南北韓문제의 자주적 해결방향의 모색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정부와 경제계는 政經分離원칙이건 아니건 우리 나름의 非政治的 교류부문, 특히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한국의 경제개발경험과 5大洋 6大洲를 누비는 기업가정신, 그리고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건설능력(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의 東北亞경제권 진출노력을 逆利用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존 우방국가와의 관계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족과 국가적 차원의 汎太平洋경제협력 방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학계와 전문가는 체제와 이념, 主義 등의 선입견 내지 고정관념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국가적 차원의 장래에 대한 實事求是의 시각정립과 단계적 대응방안의 연구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多元的 노력이 결실될 때 韓·中관계의 역사적 당위성은 긍정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믿어진다.

참 고 문 헌

- 金東成, 『中共對外政策論』, 法文社, 1988.
- 金泰弘, 『韓國과 東北三省과의 經濟展望』, 한국일보사, 1989.
- 大韓貿易振興公社, 『中國省, 特區經濟概況』, 1988.
- 박두복, 『中國의 沿岸發展戰略과 황해』, 외교안보연구원, 1988.
- 申泰容 外, 『中共交易總覽(投資篇)』, KIET, 1988.
- 洪勝彥, 『東아시아 經濟協力の 展望과 課題』, 産業研究院세미나, 1989.
- 吉林省社會科學院, 『蘇·朝·日對外經濟關係專題研究報告』, 長春, 1988.
- , 『中國東北亞區同東北亞國家經濟關係』, 長春, 1989.
- 龍大林, 『中國經濟開發戰略』, 1983.
- 馬洪, 『中國社會主義現代化的道路和前景』,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8.
- 木村明生, 「浮上する東北亞經濟圈構想」, 『蘇聯研究』創刊號, 韓蘇問題研究所, 1990.
- 薄一波, 『中國東北經濟』, 中國計劃出版社, 1988.
- 方秉鏞, 『遼中南經濟區建設問題探索』, 大連: 東北財經大學出版社, 1988.
- 馮大正 外, 『對外開放中的優惠政策』, 天津: 全國開發區經濟理論研討會, 1988.
- 孫世禮, 『世界經濟中心的轉移與蘇聯的對策』, 東北亞研究中心, 長春, 1989.
- 李相文 外, 『亞洲「四小龍」』, 北京: 新華出版社, 1988.
- 張世和, 『實現東北亞經濟圈的可能性』, 長春: 吉林大學朝鮮研究所, 1988.
- 鄭寧, 『在實施沿海經濟發展戰略中充分發揮經濟技術開發區的作用』, 天津: 全國開發區經濟理論研討會, 1988.

趙紫陽，『關於沿海地區經濟發展問題的報告』，黨中央委，1984。

陳龍山，『東北亞經濟圈與中韓經濟合作』，長春：吉林省社會科學院，1989。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Consultants Inc., *The China Investment Guide* 3rd ed.,
1987.